

2019년 미국 고용 전망

Randall W. Eberts (미국 W.E. 업존 고용연구소 소장)

■ 머리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및 이민 정책이 초래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은 2018년 하반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상당 기간과 2017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 경제는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임박한 무역전쟁, 멕시코와의 국경을 주요 타깃으로 한 강경하고 비인간적으로 여겨지는 이민정책, 연방준비제도의 꾸준한 통화정책 강화,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검사의 거침없는 수사 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주식시장은 2018년 9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분기 GDP 성장률은 4.2%를 기록했다. 그러나 12월이 되면서 주가는 약 20% 하락했으며 경기 둔화 돌입 가능성이 조짐을 드러냈다. 많은 관측자들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질문은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현재 시장의 반응을 통해 2019년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이다.

2018년 상반기에는 고용증가세가 지속되었다. 12월까지 99개월 연속 고용이 증가하는 전례 없는 기록이 만들어졌으며 12월에 예상보다 높은 31만 2천 개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2018년 12월 전년동기대비 약 29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으며 실업률은 약 3.9%에 머물렀다. 그러나 숙련 노동력의 공급 문제는 지속적인 우려로 남아 있다.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이 공석률(vacancy rate)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구인건수가 구직자 수를 추월했다. 3%를 상회하는 소득

증가율이 노동시장 유인책으로 작용했으며 고용률은 60%에 안착된 것으로 보인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숙련 이민자들에게 의존하는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호황이 여름까지 이어진다면 2차 대전 이후 최장기 호황이라는 기록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18년 9월부터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경제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경기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지만 일부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9월 역대 최고점을 찍은 주가가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12월을 맞이했다. 주식시장이 반드시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예측기제는 아니지만 미래 금융 이벤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동안 물류업체 페덱스를 비롯한 몇몇 주요 미국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 전망을 하향조정했으며, 3분기 수출은 수출품목 8.4%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아 4.9%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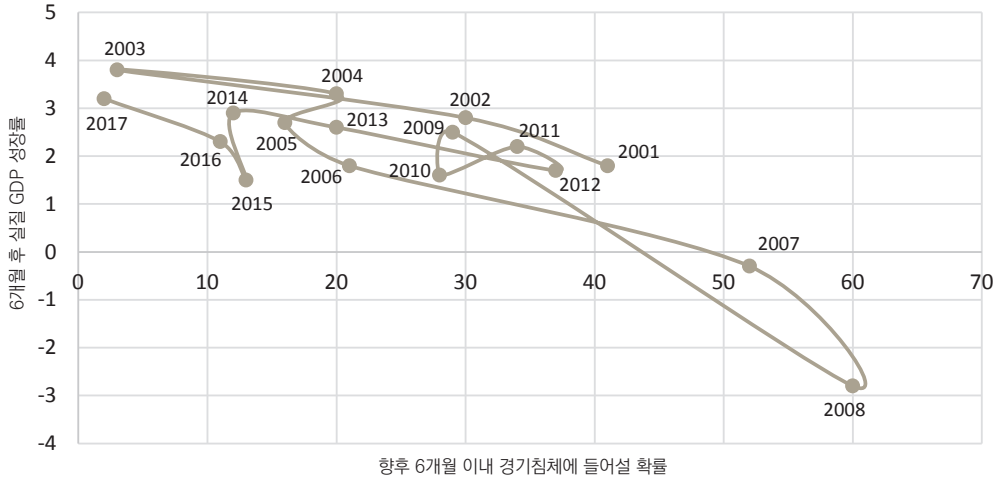
3분기 개인 소비는 소폭 하락했으며 컨퍼런스보드(CB)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몇 포인트 떨어졌다. 주식시장 하락의 (실제 또는 심리적) 영향은 멕시코 국경 장벽건설 예산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 간 교착상태로 인해 연방정부 부분 폐쇄인 섯다운이 시작되면서 더 악화되었다. 정부 섯다운¹⁾은 1월 19일 현재 30일째에 이르면서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80만 명 이상의 정부 공무원들이 섯다운 이후 도래한 1월 첫 급여 일자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 교통안전청(TSA) 요원과 항공관제사들을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이 정부가 업무를 재개할 때까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 미 경제는 더 큰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을까?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기업은 없다. 2019년을 경기하락세 속에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미 경제가 향후 6개월 동안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2001년부터

1) 편집자 주: 이 글은 1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스톱갭(임시 준예산) 법안에 서명하면서 섯다운이 일단 해제되었다.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해 섯다운 재발을 막았고, 국경장벽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섯포했다.

[그림 1] 무디스의 6개월 이내 경기침체가 시작될 확률 전망과 전망 후 6개월간 실질 GDP 성장률 간 관계 (2001~2017)



관련 확률을 예측해 온 무디스는 11월 미국 경기가 침체될 확률을 15%에서 17%로 2%p 높게 조정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가능성은 꽤 낮은 상태이며 2%p 상향조정이 무디스의 경제전망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사하지 않는다.

[그림 1]은 향후 6개월 이내 경기침체에 들어설 확률에 대한 무디스의 전망과 해당 기간 실질 GDP 성장률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2007년과 2008년의 경우에 그러했듯이, 예측 확률이 50% 이상이면 경기침체에 들어서게 된다. [그림 1]에서 확률이 1% 증가하면 연간 GDP 성장률 0.08%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3.4% 증가했기 때문에 향후 6개월 안에 성장 중단 또는 침체로 들어서려면 예측 확률이 60%에 가까워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20여 명 전문가들의 예측 역시 무디스의 전망과 일치한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19년 2분기 실질 GDP 감소 확률을 13.6%, 3분기의 경우 19.1%로 잡고 있다. 무디스의 3분기 예측보다 높기는 하지만 9월 조사에서 본인들이 제시한 수치보다는 낮다.²⁾

2) 무디스가 사용한 방법은 일련의 지표에 토대를 두고 있는 반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20명가량의 예측 전문가들에게 추정치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추정치를 도출한 기준은 알지 못한다.

[그림 2] 구인건수당 구직자 수



전문가들은 2019년 실질 GDP가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2018년 성장률보다는 낮지만 2009년 경기호황이 시작된 이래 기록된 분기별 평균 성장률보다 0.4%p 더 높다. 또한 월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고 속도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다. 2010년 10월 이래 고용이 월 평균 20만 명 증가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월평균 182,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이 4% 미만에도 머물고 구인건수는 평균 추세를 훨씬 넘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석을 채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BLS가 구인건수 추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구인건수가 구직자 수를 추월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 초에만 해도 1건당 1.07명이던 구인건수당 구직자 수는 2018년 11월 현재 0.85명에 그치고 있다. 2018년 초반 이래 실업자 수는 70만 9천 명이 줄어들고 구인건수는 85만 건이 증가한 상황에서 고용주들이 숙련 노동자 부족에 대해 불평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소득증가률이 전년동기대비 3.1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노동력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구직자를 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실업률은 2.1%이다. 고졸의 경우에도 2018년 12월 기준 실업률은 4% 미만이었다. 10대(12.5%), 흑인(6.6%), 히스패닉(4.4%)의 경우에만 4% 이상을 기록했다. 구직단념자의 수조차 2018년

초에 비해 21% 감소하여 10만 명 정도 줄었다.

■ 무역분쟁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기간 중 미국이 체결한 많은 무역협정이 미국에 끔찍한 합의였다고 비난하면서 당선이 되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11개국과의 협상에서 탈퇴했다. TPP가 미국을 포함하여 체결되었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 될 수 있었으며 미국은 급성장하는 환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떠난 이후 남은 11개국은 합의문을 일부 수정한 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명했다. CPTPP는 2018년 12월 30일 6개 당사국이 협정 기준을 완료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자동차 및 기타 제조상품,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비롯하여 관세장벽이 낮아졌으나 미국의 탈퇴로 지적재산권 및 기타 보호와 관련된 까다로운 조항들이 생략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중국과의 양자 무역분쟁에 돌입했다. 2018년 1월부터 미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다수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그 규모는 2,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의 대중 수출품에 대해 1,1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대두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미국산 농산품의 수입을 거부했다. 미국은 이 외에도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행히 12월 중국과 미국은 90일간의 휴전을 맺고 추가적 관세 부과나 기존 관세 인상의 한시적 중단에 합의했다. 12월 말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했던 관세를 다시 인하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다. 1월 초 미국과 중국은 사흘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으며 양측은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동 회담의 성격을 기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침해, 영업비밀 사이버 절도 등과 관련하여 구조적 변화를 성취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회담을 개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³⁾ 중국은 “양측이 공통 관심분야를 다루기 위한 토대를 놓기 위해 무역 관련 사안과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공유된 견해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고, 심도 있고, 철저한 논의를 가졌다”고 보다 일반적인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⁴⁾

긍정적인 뉴스로는 2018년 10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대한 합의를 들 수 있다. 3개국이 합의한 동 협정은 3개국 모두가 비준을 완료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효된다. USMCA는 NAFTA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미국의 낙농가들은 152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을 소폭 확대했으며 3개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자동차와 트럭 생산을 확대할 유인책이 증가되었다. 이 두 조항은 낙농업과 자동차 산업의 고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각국의 경쟁우위를 약화시키고 당사국들의 광범위한 국내외 공급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NAFTA와 달리 노동자 또는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차이점이다. 하지만 NAFTA를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서명된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가장 현대적이며,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균형이 잘 잡힌 무역협정(most modern, up-to-date, and balanced trade agreement)”으로 칭찬했다.⁵⁾

USMCA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무역협상의 정치적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으로 강력한 조항 하나를 담고 있다. 협정은 3개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협상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관측자들은 동 조항을 중국 조항으로 부르고 있다. 중국과의 일방적 협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32조 10항은 USMCA 당사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와 자유무역 협상을 개시할 때 3개월 전에 타 당사국에 통보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타 당사국은 협정이 서명되기 전에 합의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협정이 발효된 이후 북미 3국 간 체결된 협정을 해지하고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⁶⁾ 소식통에

3)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9년 1월 10일자 게재.

4) “Analysts see ‘several signs of modest progress’ in latest US-China trade talks,” Everett Rosenfeld, CNBC, 2019년 1월 10일자 게재.

5)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website, 2019년 1월 10일자 게재.

6) “Nafta’s China Clause Is Latest Blow to Trudeau’s Asia Ambitions,” Josh Wingrove, Bloomberg.com, 2018년 10월 4일자.

따르면 동 조항으로 인해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관계 유지를 위해 중국과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야심을 접어야 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하는 11개국과 함께 TPP에 남았다면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양자간 협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위 말하는 중국 조항을 이용해서 미국의 교역 파트너들이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 쪽에 줄을 서도록 강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가장 현대적이며,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균형이 잘 잡힌 무역협정”으로 간주한다.⁷⁾

■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미국이 국경을 통제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주로 행정 명령을 이용하여 백악관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시도했다.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은 이슬람권 국가, 멕시코,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자 하는 두 차례의 시도는 미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들의 판결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시도에서 대법원이 5 대 4의 결정으로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냈던 판사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2차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수용을 허용한 1944년 대법원 판결보다 나은 바가 없다는 강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했다.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에 다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수천 명의 불법 외국인들이 놀라운 속도로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에게 해를 가하는 나쁜 인격체들이 있다는 것이 대통령

7)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website, 2019년 1월 10일자 게재.

8) “Trump’s Travel Ban Is Upheld by Supreme Court” Adam Liptak and Michael D. Shear, New York Times, 2018년 6월 26일자

이 내세우는 근거이다.⁹⁾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상이 그릇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메시지를 고집하고 있다. 불행히도 그의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대중들이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다수가 합법적 통로를 이용한다고 믿는 미국인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합법 이민자의 비율은 76%에 이른다.¹⁰⁾ 또한 퓨리서치센터의 2018년 6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과반수(56%)가 장벽 확대를 반대하고 40%만이 지지하고 있다.¹¹⁾

이민을 제한하고자 하는 또 다른 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H-1B 비자 발급 현황을 조사하고 남용 가능성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¹²⁾ H-1B 비자는 IT기업들이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없을 때 외국 인재를 고용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약 8만 5천 건의 H-1B 비자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단속으로 불확실성과 공포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H-1B 비자를 통한 인재 선발을 대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 사이에 불확실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8월에 애플, 시스코, IBM을 비롯한 미국 대표 IT 기업 CEO들은 국토안보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민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불공정 시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커리어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고숙련 인재들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정책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공석을 채우기에 충분히 자격을 갖춘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H-1B 비자 발급 현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업률이 4%에 못 미치고 고용이 월평균 20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인재를 찾는 데 실패하거나

9) 신뢰할 만한 모든 자료에 따르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범죄율은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다. 참조: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8/11/30/key-findings-about-u-s-immigrants/>

10)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8/11/30/key-findings-about-u-s-immigrants/>

11) “How Americans See Illegal Immigration, the Border Wall and Political Compromise,” John Gramlich, Pew Research Center, 2019년 1월 11일 게재.

12) 트럼프는 2017년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토안보부가 지원자 심사 강화를 목표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동 행정명령은 최근야야 비로소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심지어 다른 국가에 빼앗기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의 H-1B 비자의 미래에 불안해 하는 인재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외국 국적자의 수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캐나다는 신규 이민자를 거주지가 아닌 시민권을 기준으로 추적)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활동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취업 알선업체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불안해 하는 H-1B 비자 보유자들의 문의가 폭증했다.¹³⁾

■ 연방정부 섯다운

대통령의 장벽건설 예산에 대한 완고한 주장은 최근 연방정부 섯다운을 초래했다. 의회는 주기적으로 부채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미 재무부가 채권을 계속 발행하여 정부 운영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미 상·하원은 2018년 12월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장벽건설에 필요한 57억 달러의 세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정부 섯다운은 2019년 1월 19일 현재 30일에 가까워지면서 미 역사상 최장기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8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가 상태로 2019년 첫 급여 일자에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정부가 운영을 재개할 때까지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공항 보안 체크포인트에서 일하는 TSA 요원과 항공기 관제사와 같은 필수인력은 무급상태로 근무 중이며 나머지 인력들은 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무급휴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무급휴가 중인 많은 공무원들은 직장 규정에 따라 무급휴가 중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달 받는 월급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공무원들은 정부 운영이 재개되어 밀린 급여를 받을 때까지는 생계를 유지할 다른 수단이 없다. 온라인 부동산회사 Zillow에 따르면 무급휴가 중인 공무원들이 매월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월세는 약 4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덴버와 같은 도시와 웰스파고, 체이스은행 등과 같은 기업들은 무급휴가

13) "Trump's Immigration Policy Has Foreign Tech Talent Looking North of The Border," Emily Rauhala, Washington Post online, 2019년 1월 10일자.

중인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을 때까지 대출 상환을 연기하는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¹⁴⁾ 정부 공무원 이외에도 수만 명의 정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결국에는 체불임금을 받게 되겠지만, 이들과 달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근무일수에 따라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섣다운 기간 중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다행히 노동부는 섣다운 대상 부처가 아니다. 1만 6천 명의 공무원들은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청구를 처리하고 있으며 탄광과 같은 위험한 근무지에서 안전기준 준수를 감독하고 있다. 시장이 고대하고 연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월별 고용 및 실업 통계를 제공하는 BLS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BLS는 실업, 고용, 생산성, 시간활용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ATUS) 등을 비롯한 모든 주요 통계자료가 일정에 맞게 공개될 것이라는 성명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노동부와 BLS는 2019년 9월까지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섣다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은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실업 통계자료의 기반이 되는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는 BLS와 인구조사국이 공동 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BLS는 12월 조사 결과를 담은 개인별 파일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1월 실업자 수 추정치를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구조사국과 마찬가지로 상무부 산하에 있는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도 섣다운 대상 기관이다. 이는 4분기 및 2018년 전체 GDP 성장률 잠정치가 예정대로 발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시점에서는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 정부 운영 재개에 관한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않고 있다.

14) "Amid Government Shutdown, Here's What Companies Are Doing To Support Federal Employees," David Hessekiel, Forbes on line, 2019년 1월 18일자 검색(www.forbes.com/sites/davidhessekiel/2019/01/10/amidst-government-shutdown-heres-what-companies-are-doing-to-support-federal-employees/#2aaec1c566a2).

■ 노동자 보호 및 복지

노동자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법률은 대부분 주 의회에서 다루어져 왔다. 연방의회는 초당적 지지가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몇몇 주들은 두 가지 종류의 조항들을 통과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출산휴가 확대(일부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정책이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는 부모들이 최대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가 출산 후 12개월 이내 총 12주의 유급 또는 무급 일자리 보장 휴가(job-protected leav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휴가 중에도 근무기간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휴가 사용을 위해, 노동자는 휴가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최근 12개월 이내에 최소 1,250시간의 근무이력이 있어야 하며, 반경 75마일(약 120km) 이내에 있는 작업장에서 적어도 2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적용된다. 뉴욕주 역시 12주의 무급휴가를 제공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와 동일한 기준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런 종류의 법률들이 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에서 다른 국가에 뒤처져 있다. 미국은 OECD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1993년 제정된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FMLA)이 자격을 갖춘 노동자에게 제한적인 가족돌봄 필요에 대해 연방 차원의 무급휴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고용주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 법률하에서 노동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PFL)를 사용할 수 있다. BLS 조사에 따르면 PFL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력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분야별로 비율이 상이한데, 정보(34%), 금융(31%), 전문직 및 관리직(27%), 교육 및 의료보호 서비스(20%) 등과 같은 부문의 경우 비율이 평균을 훨씬 넘어선다. PFL의 사례로 미국의 대표적인 시리얼 기업 제너럴 밀스가 제공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비노조 생산직 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산모는 18~20주까지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2주의 육아휴가, 2주의 돌봄휴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직계가족의 돌봄), 최대 4주의 장례휴가가 있다. 웰스파고, 리버티 상호보험 등과 같은 기업들도 유사한 PF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특정한 가족돌봄 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주 차원의 가족휴가보험(Family Leave Insurance: FLI)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휴가 중 받지 못한 급여의 일정 부분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실업보험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휴가기간과 임금대체율은 주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주 단위 FLI 제도하에서는 4주(로드아일랜드)에서 8주(뉴욕)까지 다양하다. 뉴욕의 경우 신규 제도가 완전히 이행되는 2021년에는 휴가기간이 최대 12주로 확대된다. 자격요건은 보통 주 내 최저고용기간, 최저소득, 보험금 납부 등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 차원 FLI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모두 급여세(payroll tax)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된다.¹⁵⁾

몇몇 주는 또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고용주가 첫 채용면접에서 범죄경력 또는 급여이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면접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관련 질문들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채용 전에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 마지막 단계에서 급여이력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의 노동자 보호 법률로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법률 AB450은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장 없이 작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장 없이는 직원의 인사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른 주들이 인구가 가장 많고 노동기준 설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사례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 보호 법률 제정 이외에도 많은 주들이 관할권 내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6개 주는 2019년 시간당 0.5달러를 인상했으며 4개 주의 경우 0.85달러를 인상했다.

15) Paid Family Leave in the United States, Sarah A. Donova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년 9월 12일 업데이트.

■ 요약

미국 경제는 행정부의 무역 및 이민 관련 정책에 기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 몇 주간 경기둔화 우려 양상을 드러냈지만 아직은 호황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은 월별 일자리 증가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소득증가율 역시 연 3%를 넘어섰고 구인건수가 구직자 수를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에 경기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을 20% 이하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가능성이 유의미한 경기둔화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며 실제 경기침체를 초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경기호황이 궁극적으로 그 종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력에 대한 유인책이나 이민 증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유입되지 못한다면 고용주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해외 이전 또는 사업규모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해외 이전은 고용증가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사업규모 축소는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의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 행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이민과 무역정책이 경기호황의 종말을 재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2018년 하반기 경제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와 2019년을 장기화된 정부 섯다운으로 시작하면서 출발이 불리했다는 점이 충분한 경고로 작용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이 미래 경제성장에 보다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KLI**